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산업부 하반기 업무보고...사업 시행자 연내 선정 성장엔진 사업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지역성장’ 제조 AI 팩토리 220개로...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와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를 연내 지정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한다.

지역 성장을 위한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

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등 산업자원 안보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통해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

.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성장, 경제영토 확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

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M.AX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압축 및 데이터화와 휴먼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산업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매립단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초중질유·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엔지니어링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엔지니어링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안공항 하늘길 빠르면 내년 초 다시 열린다

국무회의서 재개항 일정 논의 참사현장 유해 수색 이달 종료 안전시설 정비 등 5~6개월 소요

무안국제공항의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유해 수색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족 협의와 안전시설 정비, 사전 점검 등에 추가로 5~6개월이 필요해 실제 재개항은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재개와 관련해 희생자 유해 수색은 철저히 마무리하되,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해 재개항이 과도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수색이 8월까지 끝나면 재개항 문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유가족이나 피해자들과 협의가 돼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무안 공항이 재개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유해 발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폭염과 장마로 인해 작업 시간이 줄어들 유해 수색이 다소 지연됐지만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져 재개항이 결정되더라도 안전시설 보완과 사전 점검 등에 5~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4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에 이 대통령은 이퀄라이저(활주로 방위각 시설) 복구에 대해 “유해 수색이 모두 끝나면 사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도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퀄라이저 공사는 재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현재 이퀄라이저는 사고 당시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 뒤에야 철거나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유해 수색은 8월 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됐고 블랙박스 분석은 해외에서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전문 조사도 국내와 용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조사 완료 여부와 재개항 여부는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해 수색이 끝난 뒤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재개항이 너무

늦어진다”며 “재개항 문제는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여한이 없도록 수색은 철저히 하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복구 공사도 하고 사고 조사도 계속 진행하면 된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유족들과 잘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특별시, 민선 9기 대변인 등 공모 착수 18~24일 원서 접수...정책총괄수석도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변인과 언론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대변인 1명과 언론담당관 1명을 각각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지난 3일 내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대변인은 3급 상당, 언론담당관은 4급 상당이다.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간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현직 경력직 공무원은 전보나 승진 등을 거쳐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하한액의 130% 범위에서 연봉을 별도 협의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보

수를 받는다.

대변인은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과 언론 대응, 정책 메시지 관리, 위기 관리 홍보, 대외 홍보전략 수립 등을 맡는다. 언론담당관은 언론홍보계획 수립과 보도자료 작성·배포, 취재 지원, 언론 모니터링과 여론 분석, 홍보 콘텐츠 기획 등을 담당한다.

응시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기관, 방송·신문·통신사,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언론·홍보·공보·정책홍보 관련 경력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31일 발표되며 면접은 다음달 3일, 최종 합격자는 9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책총괄수석 1명도 모집한다.

전문임기제 ‘가’급(2급상당) 임기는 1년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접수사 금지...고소·고발 경찰에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동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범죄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폭염 상황 반영 납품기한 탄력적 조정을”

▶1면에서 기업들은 이동식 냉방설비를 가동하고 보냉조기 등을 지급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넓은 공장 전체를 냉방하기 어려운 데다 보냉조기 등 보호장구는 움직임을 방해해 작업자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냉방설비 가동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냉방공간도 별도로 운영해야 해 폭염 대응 비용이 생산현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늘리면 실제 작업시간과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작업시간을 연장하기도 쉽지 않아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관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크다. 발주 단계에서 납품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면 폭염으로 인력 확보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일정을 조정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할 경우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냉방장비 지원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작업중지와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을 일시적인 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가긴과 관급제품 납품기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관급 물량은 납품기한이 한 번 정해지면 폭염으로 인력 확보와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일정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자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도 무리 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 당국이 폭염 상황을 반영해 납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면 ‘호남 AI·반도체’서 계속

정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전력·용수 수급 전망을 연계한 종합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과다하게 배분됐지만 사용률이 낮은 하천수는 회수·조정해 산업 수요에 맞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주는 지역 주도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한전기술지주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연계해 연구·실증·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ESS와 전기차 연계형 전력망(V2G),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실증하는 규제프리존을 구축한다.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직류배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엔지니어링을 유지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임지 특례,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 혜택

도 검토한다.

2028년에는 나주에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정보센터를 구축해 폐배터리 수거부터 실증·연구, 재사용·재활용까지 연결하는 배터리 순환거점을 조성한다.

섬진강은 국내 5번째 독립수계로 격상한다. 기후부는 섬진강유역정을 신설하고 ‘섬진강수계법’을 제정해 유역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햇빛·바람소독마을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망 주변 주민에게 수익률이 보장되는 건설사업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계통소득’도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정비, 초거대 AIDC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력감독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교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K-GX 전략’을 올해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